

주간시니어뉴스(2015년 7월 6일)

1. 기초연금 1주년, 개선점은?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1년이 됐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이 노인 1인 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어떤 문제점을 꼽을 수 있나?)

우선,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달성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목표수급률 달성 여부가 운영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실제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66.1~66.8%로 목표수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표수급률을 달성하려면 잠재적인 수급자 발굴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현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적절한 지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과 연계해 인상폭이 결정됐는데,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과 연계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렇다. 기초노령연금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 반면, 기초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급여가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해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이 물가보다 상승폭이 훨씬 크다. 실제로 올해 급여 조정 시 적용된 2014년 물가상승률은 1.3%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상승률은 3.2%였다. 그러니까 물가와 연동하는 기초연금 상승폭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법에는 5년에 한 번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급여 연동지수를 물가상승률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과 연동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가 줄어드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사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기초연금을 설계할 때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역할 분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계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급여 증가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혜택이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기초연금과 관계, 그리고 국민연금과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지자체가 기초연금 재정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기초연금 예산은 국고와 지방세로 운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고 비율이 40~90%로 책정돼 있다.

기초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고 맞서고 있다. 지방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니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알아서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이 대부분 지방정부 관할이니 필요한 만큼만 보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국고보조 상향 등 재원 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시니어 구직자 10명중 4명, 퇴직 후 '1년 이상' 백수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 구직자들의 절반 가량이 사전 준비 없이 퇴직하고, 구직자 10명 중 4명은 퇴직 후 1년 이상 백수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한 취업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40세 이상 중장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 절반에 가까운 43%가 재취업 준비기간 없이 퇴직을 했으며, 10명 중 4명(37.1%)은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으로 장기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1년 이상 장기 구직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26.6%)이었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벌인다는 얘기다. 반면,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2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도 16.9%나 됐다.

(왜 이렇게 재취업기간이 길어지는 걸까?)

이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만'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현 직장의 임원이나 관리자급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라면 어느 곳이나 재취업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재취업하려는 구직자는 많지만, 비슷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다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보통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경쟁률이 100대1까지 치솟는다는 사실을 믿는 시니어 구직자는 많지 않다.

보통 퇴직 후 3~4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어렵겠구나마 재취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당장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뽕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퇴직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인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나만은 정년까지 갈 것'이란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재직 당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느긋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준비를 하려는 경우도 일에 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퇴직 전 재취업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3%가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23.6%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준비했다'는 사람은 33.4%에 불과했다. 정년퇴직한 중장년 구직자 10명중 7명이 확실한 준비 없이 재취업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한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조사에서 중장년 구직자들 스스로 시니어 채용시장에 맞도록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장이나 부장급은 6개월~1년 이내에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 고위직인 임원급은 1년 이상 장기 구직자가 42.8%로 최고치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취업시장에서 고위 임원출신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왕년에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는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퇴직은 앞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막연한 재취업 기대감을 버리고 현실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자신이 앞으로 여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잘 하는지 진진하게 고민하고, 정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기술·기능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재취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 퇴직 후 곧바로 계획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